

# ‘1시군 1생활인구 특화’ 공모 추진

전북자치도, 인구활력추진단정례회의… 생활인구 실태 분석 공유·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전략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인구활력추진단 상반기 정례회의’를 열고,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방안과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와 시군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활력추진단’은 전북자치도와 11개 인구감소(관심)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는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 인구청년정책과장, 도 실국 주무과장, 11개 시군의 인구·경제·복지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소속 연구진이 함께해 정책적 분석과 제언을 제공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전북연구원 이주연 박사가 ‘생활인구’ 개념과 관련한 전북의 실태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하는 인구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거주 인구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지역별 생활인구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착수하고, 시군별 전략사업을 지원하는 ‘1시군 1생활인구 특화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시군이 주도적으로 생활인구 유입 모델을 발굴하고, 도가 이를 평가·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인구활력추진단 상반기 정례회의’를 열고,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방안과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공모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생활인구 유입 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정부 재원으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2026년에는 도(광역계정)에 193억 원이 정책 배분되고, 시군(기초계정)에는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될 예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광역계정 사업의 성과 재점검을 통해 내년도 투자계획을 재정비하고, 기초계정의 기금 확보를 위해 시군별 맞춤형 컨설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컨설팅단은 시군의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평가 기준에 맞는 전략 수립을 도울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시군별 인구감소 대응사업 추진 상황도 공유됐다. 각 시군은 경제 활성화, 청년 정착, 복지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이며, 도는 시군 간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해 인구활력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 간 연계 협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성과 분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인구문제는 단기 대응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장기 과제”라며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인구감소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지역 곳곳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성과를 극대화해 추가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도(광역계정) 946억원, 11개 시군(기초계정) 3,152억원을 확보해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추진 중이다. 향후 도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지방의원 징계에 개입 말라”

한경봉 군산시의원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 징계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 진상 밝힐 것”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지난 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 징계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군산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결정과 본회의 징계안 부결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경봉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동료 의원이 공개적으로 “모르든 공부 해야지”라며 고성과 비난을 퍼붓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명백한 윤리 위반이었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공개사과’라는 사실상 경징계 결론을 내렸고, 3월 28일 본회의에서는 해당 징계안이 부결되면서 아무런 징계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불과 한 달 전, 비슷한 사건으로 출석정지 3일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이번에는 징계가 무산됐다”며 “윤리특위 위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달라진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같은 사안에 대해 징계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준은 과연 누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이번 징계 무산 과정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여러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징계 반대를 독려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는 정당이 의회의 윤리적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이지, 특정 정당의 하청업체가 아니다”라며 “의회의 윤리적 판단이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는 현실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번 징계 무산 결정이 앞으로 군산시의회의 윤리 기준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앞으로 군산시의회에서 막 말과 비방, 인격 모독이 용인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 동료 의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막말을 해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의회의 윤리적 판단이 정당의 개입에 따라 달라진다면, 시민들이 군산시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의회의 품격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의회가 특정 정당의 압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으로 바로 서야 한다”며 “이번 사안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막말 없는 의회, 편 가르지 않는 의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공감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윤리적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 민주 도당, 산불 예방·피해 복구에 총력

도·시군과 협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정읍시와 무주군에 전북자치도당 민생지원팀을 긴급 파견해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한 복구 및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경북 안동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이동급식 차량과 승합차를 활용한 급식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 및 생활복지과의 협조로 양말 2,000족과 여성

용 속옷 3,500명분 등 약 1,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완주군은 응급구조소 100개, 담요 100개 등 재해구호물자 지원을 준비했으며, 무주군은 20ha 규모로 산불 피해 지역에 현장조사 및 임시거처 제공 등 복구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읍시는 소성면 화동리에서 발생한 주택과 창고 화재 및 이재민 12명에 대해 임시거처 제공과 화재 잔재를 처리 계획을 수립했다.

김제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예방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월터, 응급구조소, 취사구조소, 모포 등 구호물품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경북, 경남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민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특별성금

모금 활동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등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주민 대의계획 수립과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산불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철저한 이투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금된 성금은 전액 산불 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임승식 전북자치도의회

정읍 산불 피해 이재민 위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지난달 28일 고창군 상내면의 한 아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정읍까지 확산해, 화마가 휩쓸고 간 정읍 소성면 금동마을을 찾았다고 밝혔다.

임승식 의원은 민가 등 화재피해 현장을 확인한 뒤 이재민 대표소인 구룡경로당 임시숙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임승식 의원은 “삶의 터전을 잃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만나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전북자치도가 이미 지원하고 결정한 사항 외에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박춘관)은 이날 구호품을 전달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전북자치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 방안과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소속 장영국 대표위원을 비롯해 임종명 연구책임, 김희수 의원, 박용근 의원, 이수진 의원, 오현숙 의원 등이 참석해 연구활동 계획을 공유했으며,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정책연구 용역과 선진지 답사,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만호 기자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확대 근거 마련

서난이 도의원, 조례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납상까지 확대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자궁경부암 외에 자궁경부 전암 병변, 질과 외음부암, 항문암 및 입인두, 혀, 편도 등의 두경부암 등을 일으키지만 예방접종으로 관련 암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지원대상은 12세~17세 여성청소년과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지원대상인 아닌 여성과 남성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서난이 도의원은 국비지원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18세~26세 저소



독층이 아닌 여성과 12세~26세 남성에게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7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것이다.

서 의원은 “최근 자궁경부암 환자 중 20~30대의 청년층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남성환자의 수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만큼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에서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필수예방접종 지원의 필요

성에 공감해 매년 지원대상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부터 부산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국비지원대상이 아닌 26세 이하 여성들에게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지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지원대상을 26세 이하 도민 전체로 규정할 것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최초이다.

끝으로 서 의원은 “비록 지원의 시급성 때문에 전북자치도차원에서 먼저 납상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지만 빠른 시일내에 정부차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대상에 26세 이하 모든 여성과 남성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전북자치도 조례 제정이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전주역, 새로운 문화산업 동력으로

민주 정동영 의원, 전주역사 증축 관련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역사 증축 공사 현장에서 전주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도지주태공사 관계자들과 전주역사 증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역은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증가와 KTX 운행 확대에 따라 철도 이용 수요가 늘면서 증축 사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전주역 증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892억 원으로, 국비 692억원, 한국철도공사 127억원, 전주시 7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주역사 증축 사업은 역사 증축, 선상 연결 통로 신설, 주차장 확대, 교통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며, 2025년 12월에는 선상 통로와 후면 주차장, 2026년 12월에는 신역사와 전면 광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은 “전주역 앞에 만들어질 광장은 시민들이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전주시의 새로운 문화·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정동영 의원은 다시 한번 △역사 길이를 축소된 104m에서 원래 설계된 대로 127m로 확장하고 △선상 연결 통로의 폭을 4m에서 6m로 넓히며 △상징적 공간인 ‘빛의 돛’을 당초 계획인 40m 규모로 조성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디자인된 전주역사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모습의 전주역사는 전체 에너지의 30%를 지열(14%)과 태양광



(16%) 등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친환경 역사’에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김국기 기자

## 남원시의회,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의결

남원시의회가 지난달 24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태 의장과 김정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이 의결되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안에 따라 남원시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적합 일자리를 발굴하고,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단체·개인에게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원=김기두 기자